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5. 11. 24(화)	
		작 성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(Tel. 044-200-2341)	문 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/업정책과장 이은정 (Tel. 044-200-2211)
24일 17시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 배포 산업부, 안전처도 해당 기자단에 동일한 자료 배포			
※ 관계부처 : 안전처 예방총괄과장 김중열(Tel. 02-2100-0613), 방호조사과장(Tel. 02-2100-0613),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박영삼(Tel. 044-203-4430), 에너지안전과장 조웅환(044-203-5130), 환경부 화학 안전과장(044-201-6831),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,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의식(044-201-3674)			

정부, '안전한 겨울나기 대책' 중점 점검

- 황교안 국무총리, 현장점검 이어 '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' 주재
- "동절기 비상대응 태세 강화, 종합적인 산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것"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'를 열어 '동절기 안전대책'과 '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대책'을 논의하였다.
-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·대처 방안과 함께,
 - 그동안 화학물질 등 안전사고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'산업단지 안전'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.
- 황 총리는 "겨울철은 1년 중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고, 작년 2월에는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"면서
 - "정부에서는 화재, 한파, 폭설 등 동절기에 예상 가능한 재난에 대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, 각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- 황 총리는 "특히 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재난이므로, 각 부처에서는 화재 취약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본격적인 동절기 전에 충분한 예방태세를 갖추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"안전처를 중심으로 '동절기 안전 24시간 비상체계'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, 특히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'동절기 인정 검침제도',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'지역별 종합지원센터'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"고 지시하고,
 - "나아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'민·관·군 합동 응급 복구체계'를 갖추고, '재난 지원금 선지급' 제도 등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"고 지시하였다.
- 한편,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 위치인 산업단지 내에서의 안전 사고가 매년 증가*하는 추세임에 따라,
 - * 국가산단 사고건수: ('11) 13 → ('12) 15 → ('13) 32 → ('14) 44 → ('15.7월) 27
 - 정부는 개별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라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먼저, 화학재난사고의 예방·대응을 위해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설치된 "합동방재센터" 기능과 역량을 보강하고,
 -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 기반의 산업단지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특히 지하매설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울산·온산산단을 시작으로 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, 고위험 배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 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노후화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확대하여 단지내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.
- 황 총리는 “산업단지 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”고 강조하며,
 - “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적인 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, 벌칙 상향 조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”고 하였다.
-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지난 11월 1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안전처에 대하여,
 - “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왔고, 재난안전의 새 틀을 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”면서
 - “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- 이날 회의에는 인세진 우송대학교 교수, 하동명 세명대학교 교수,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,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,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장,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.
- 한편, 이번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‘성북참노인 전문병원’(11.7)을 방문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을, ‘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’(11.20)을 방문하여 산업단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.
 - 황 총리는 취임 이후 매월 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를 개최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야영장, 학교, 건설현장 안전 등 총 11개 분야 안전대책을 점검·논의해왔다.

※ 붙임 1. 세부 안전대책 보고서
 붙임 2. 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추진실적

붙임 1

세부 안전대책 보고서

동절기 안전대책(국민안전처)

<겨울철 재난 여건 및 전망>

- 최근 5년간('10~'14년) 겨울철 폭설·화재 등 78천여건의 재난으로 총 630명의 인명피해(화재) 및 7,740억원의 재산피해 유발
- 금년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,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,
 -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, 그 밖의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(기상청)
- ⇒ 폭설에 따른 농·축·수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, 교통통제 등의 불편 및 화재사고 등에 대비 철저한 재난대책 추진 필요

<분야별 중점 추진사항>

1. 대설대책

- (상황관리)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및 재난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체계 강화
 - 유사시 재난 예·경보 채널을 총 가동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전파 및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
- (예방활동) 내집앞 눈치우기, 비닐하우스 눈 쓸기 등 예방활동 집중홍보
 - * 반상회·이장회의·영농교육 등을 활용, 홍보활동 집중 추진(12월~2월)
- (시설관리) 지역별·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책 추진

노후주택·아치판넬 등 대설취약시설(2,332개소)	설해 붕괴위험시설로 지정, 집중관리
고가도로·램프 등 제설취약구간(2,148개소)	관리자 지정, 제설 책임 담당제 시행
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(426개소)	이장·방재단 등 '마을단위 제설반' 운영
국립공원 등 탐방로(503개 구간)	기상특보시 통행제한 및 안전점검
고갯길·교량 등 경사구간(904개소)	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치 운영

- (피해지원) 민·관·군 합동으로 응급복구에 총력 및 피해확인 즉시 재난지원금* 선지급 등으로 주민생활안정 도모

* 주택, 농·축·수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

② 한파대책

- (상황관리) 한파 발표 및 지속기간 동안 **관련부서**(유관기관 포함) 합동으로 24시간 비상지원체계 유지

- 상수도 동파, 전기·가스·보일러 고장시 신속복구를 위한 「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서비스반*」 편성, 필요시 즉시 가동

* 지자체와 전기·가스안전공사·열관리협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운영

- (예방활동) 계량기 보온조치(동파방지팩, 보온덮개 등) 및 관리 강화 및 점검원 수도사용량 확인시 계량기 동파방지 조치여부 점검

- (취약계층 보호) 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* 등 설치·운영 및 쪽방·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돌봄** 서비스 제공

* 150개소 운영(종합지원센터 10, 일시보호시설 8, 노숙인 자활·요양시설 122, 쪽방상담소 10)

** 소화기·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보급, 전기·가스 등 합동점검 실시

③ 화재대책

- (예방활동) 화재에 취약한 8개 중점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,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 특별조사 및 교육·훈련 추진

- ① 주택밀집지역 등 화재경계지구(112) ② 대형판매시설(1,898) / 영화상영관(321) ③ 전통시장(1,332)
 ④ 다중이용업소(185,919) ⑤ 요양병원(1,337) ⑥ 공동주택(38,995) ⑦ 공시장(2,342) ⑧ 축사(76,268)

- (긴급출동) 소방장비, 소방용수 및 출동로 사전점검으로 100% 가동 상태 유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

- (안전관리)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·보급 및 겨울철 안전 대책과 연계 아파트 실태조사, 노후·불량시설 정비

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(관계부처 합동)

① 산업단지 단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

-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별 운영체계 개선 검토(부처합동, '16.上~)
 - 지역별·유형별 사고 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센터별 기능을 효율화하고 안전사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

- ICT 기반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

- 센서, 모바일 등 ICT를 활용한 산단 통합재난대응 시스템을 성서, 울산 등 2개 산단에 시범도입(대구·울산시, ~'16.上)

< 성서산단 및 울산산단 IT기반 통합안전관리 시범사업 >

구분	성서산단	울산산단
사업명	산단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	스마트 특수재난대응 시스템 구축
주관	대구광역시	울산광역시 소방본부
사업 내용	산단 내 센서·CCTV 설치,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	GIS 기반 위험물 정보 통합 구축, 모바일 기기 활용 등
기대 효과	화재, 가스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, 재난 상황 발생시 초동 대응 신속화	산단 내 특수재난 발생시 상황실-현장지휘자 간 실시간 현장 상황 정보 공유 및 대응 가능

② 산업단지 화학물질·위험물 안전관리

- 석유화학산단 지하매설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

- 지하매설배관 노후화가 심각한 울산·온산산단 내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지하배관 안전진단 실시(산업부, '15.5~12월)

- 울산·온산국가산단 내 누락된 지하매설배관 정보DB 추가 구축, 사고예방 관리 강화(산업부·울산시, ~'16.下)

- 안전진단, DB 추가 구축 결과 등을 토대로 고위험 배관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산업부·울산시, ~'17.下)

- **산단별 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**
 -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(환경부, '16.下~)
 - * 화학물질 유통량,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2~3개 시범산단을 선정·추진
 - 위험도 평가결과,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**산단별 비상대응계획** 수립(환경부, '17.下~)
- **위험물 안전 강화**
 -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**50만~100만리터 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대상으로 정밀진단 실시**(안전처, ~'16.上)
 - 사고 위험이 높은 석유화학 산단을 대상으로 **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교육(非법정) 과정 개설**(안전처, ~'16.下)

③ 안전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

- **영세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**
 -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**안전보건관리지원자*** 선임 제도 도입
 - * 안전보건관리지원자는 사업주를 보조하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, 안전·보건 점검, 근로자 건강관리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행
 - 교육장소가 따로 없는 영세업체 상황을 감안, **이동식 버스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보건교육** 지속 실시(안전보건공단 주관)
 - 화학물질 관련 영세업체 대상 안전진단·컨설팅('14~'17년, 1,800개), **'大-中企 안전관리 공동체***를 통한 안전관리 협업 추진(환경부)
 - * 대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·사고대응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공동체로 현재 53개 운영 중(총 415개 업체 참여)
- **도급인의 책임 확대를 통한 하청업체 안전 개선**
 -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고,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여 하청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(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 11.16. 환노위 상정)
 - 원청의 유해위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, 정보 미제공시 하청업체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**정보청구권 제도화**(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, '16~)

④ 노후 기반시설 보강

- **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**
 - 재생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('16년까지 21개)하여 간선 도로, 주차장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 지원(국토부)
- **노후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보강 추진**
 - 국가산단 내 기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**안전진단을 정례화**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(국토부, ~'16.下)
 -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청인 지자체 중심의 보수·보강을 추진하고, 중장기적으로 안전 보강을 위한 정부차원 지원방안 강구(국토부)

구분	안 건
1차(7.29)	여름철 식품 안전대책 (식약처) * 하절기 위생취약분야 집중 관리, 자율규제체계 등
	야영장 안전대책 (문체부) * 야영장 안전기준 정착, 야영장 등록 활성화 등
2차(8.31)	교통·철도 안전대책 (국토부, 경찰청) *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및 자동차·도로 안전관리 강화 * 철도운영자 책임과 차량·시설 안전관리 강화
	여객선 안전대책 (해수부) *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지도·감독 강화 등
3차(9.23)	추석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 (안전처) * 추석연휴 특별안전대책기간 운영, 특별안전점검 등
	학교 안전대책 (교육부) * 안전점검 의무화, 학교별 안전지수, 통학버스 안전 강화
	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 (문체부) * 안전성 의무검사대상 기구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
4차(10.21)	건설현장 안전대책 (국토부) * 가설구조물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, 현장이행력 제고 등
	하청근로자 안전대책 (고용부) * 위험작업 등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등
5차(11.24)	동절기 안전대책 (안전처) * 화재, 폭설, 시설동파 등
	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대책 (관계부처합동) * 산업단지 단위의 체계적 안전관리, 화학물질·위험물 관리 강화 등